

# 수복시 민심 수습 방안

1971. 2.



본 논문은 현재의 국내외적 실정을 감안해서 예상할 수 있는 수복 통일 제형태를 논의하고 원칙적으로 평화적 방법에 의한 수복통일의 전제하에서 논의를 진행시키되 무력수복의 경우도 가상하여 보았다.

첫째로 무력수복시에는 북한전역이 수복되었을 경우와 부분적으로 수복되었을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수복되었을 경우에는 나머지 지역은 작전지역이 될 것이고 수복한 지역에서도 군정이 불가피하다. 또 북한지역전역이 수복되었을 경우일찌라도 단기적으로는 군정시기나 일종의 혼정시기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력수복의 경우 민심수습의 가장 긴요한 핵을 이루는 것은 군의 정훈국일 것이다. 그러나 수복에 대비한 정훈국의 강화책이 군당국에 의해서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로 무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에 의한 수복을 가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민심수습은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단일지주적 공산당으로부터 이탈시키는 소극적 민심수습과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을 확보하는 적극적 민심수습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로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지금까지의 반공·승공이념에 병행해서 동일이념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동일이념의 윤곽은 지난번의 8.15 특별성명으로 대략이 들어났다. 우리로서는 그 성명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천적 강령을 하루 속히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네째로 민심수습은 북한주민의 소극적 순종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적극적 참여를 기하는 장기적 대책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주민의 소외의식의 조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통일목적과는 반대로 북한주민간의 분열적 세력구축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본다.

다섯째로 국내적 대비책으로 민심수습목적을 위한 구심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세력은 북한지역내의 반공·민주세력과 남한에서 훈련된 요원으로 구성될 것이나 장기적으로 보아 북한지역의 반공세력은 민주적 훈련이 부족한 까닭에 그 역할에는 한도가 있다고 본다. 그럼으로 우리가 훈련·육성한 요원의 민심수복을 위한 전위적역할이 그 후의 북한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핵심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문화형성을 위한 우리의 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든다. 남한에 있어서의 현재의 통일문화는 반공승공이라는 단기적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산세력이 한반도에서 구출되었을 경우에 대비한 주체적 통일문화가 모색되어야 할줄 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현재 제시된 국민교육현장의 생활화는 이러한 통일문화형성의 교두보가 된다고 생각된다.





## 서

「1970년대에는 우리의 념원인 국토통일이 어떠한 형태로라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속단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다. 시시각각으로 변동하는 국제정세일반과 특히 한반도를 위요한 이해관계의 당사국 구체적으로는 미국·일본·소련·중공의 미묘한 동향 그리고 북괴의 이른바 한반도의 적화통일전략과 전술 등이 우리의 통일의 시기라 형태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제요인의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차드라도 통일의 시기라 형태를 결정함에 있어 우리의 주체적 역량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함은 매우 당연한 일로 생각된다.

우리의 목적은 한반도의 민주적통일에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한반도에서 공산세력을 구축·제거함에 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정립된 목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능률적으로 달성하는가의 과제가 부과되고 있다.

목적은 달성함에 있어 우리에게 첫째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정을 남김없이 설정하는 일이며 두번째는 설정된 모든 가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일일 것이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타당성있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대비책을 모색하는 일일 것이다.

격동하는 국제적 및 국내적 상황속에서 통일의 시기와 형태를

결정함에 있어 작용할 가변요인은 너무나도 많다.

우리에게는 주관적 목적에 충실해야 함과 동시에 통일에 작용할 가변요인에 대한 객관적이며 생철한 검토가 또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가변요인의 체계적 포착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긴급한 것은 타당성 있는 가정의 설정이며 설정된 가정하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모색하는 일일 것이다.

본론은 우리의 통일목적을 위한 대비책의 하나를 검토한 것이다. 기술한 바와 같이 무수한 가변요인의 작용이 예상되는 통일에 있어 우리의 대비책은 어떠한 타당성 있는 가정하에서만 그 실효성을 갖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무수한 가정속에서 특정한 가정을 전제로 해서 통일전후라 통일과정에 있어서의 민심의 수습책을 모색해 보았다. 문제의 본질로 보아 어느 한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써 해결될 수는 없다. 그럼으로 통일문제 전반에 걸친 전망과 가정이 지나치게 많은 지면을 차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심수습의 문제는 어떠한 정치체제에 있어서나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면서도 결국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문제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 서구의 사회과학자들의 연구대상은 안정된 정치사회에 있어서의 민심수습방안인 까닭에 그 연구범위는 비교적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통일과 같은 체제적 변동 어느



의미에서 혁명적 변동을 전제로 하는 통일문제와 결부된 민심수습 방안이 논의될 경우에는 한정된 연구대상에서 앞서 정치적 여건에 대한 판단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만일 그러한 정치적 판단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없다면 모든 대비책도 사상의 루각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 본론에서는 민심수습의 문제와 직결되는 기술적 수단만을 의논하지 않았다. 그것은 서구사회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사회화 문제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통일과 결부된 사회화문제의 윤곽만을 제시할 정도로 그쳤다. 그 후의 구체적 방법의 문제는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 및 기술적 수단의 발전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개발될 줄 안다.

마지막으로 본논문은 전적으로 필자의 주관적 가상으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문헌적 방법을 일체 적용하지 않았다. 문제의 본질로 보아 그러한 방법은 오히려 사교의 재약을 가져올 것을 염려해서이



## I. 수복과 민심수습

### 1. 문제의 중요성

1970년 8월 15일 광복 25주년을 맞아 백대통령께서 통일에 대비한 역사적 성명을 발표하고 특히 북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경고를 했다.

「더 이상 부끄러운 북한동포들의 민생을 위생시키면서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고 보다 선의의 경쟁 말하자면 민수주의와 공산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살살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적 경쟁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를 묻고 싶다」

이에 대한 북괴측의 반응이 지극히 도전적이었음은 북괴가 종전까지의 호전적 한반도의 적화통일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북괴가 호전적 침략성을 포기하지 않고, 구시대의 낡은 스탈린주의에 집착하고 있는 한 우리가 제시한 선의의 경쟁체제의 싹트는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이렇듯 북괴의 사이비 평화통일안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적 통일의 방안은 북괴의 호전적 침략정책으로 교착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괴의 남침의 가능성이 또한 커가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이점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면에 있어 압도적으로 우세한 입장에 서있는 서독과 전란의 와중에 있는 월남과는 구별되는 우리의 독특한

상황적 여건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을 위요한 교착상태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으며 현금의 세계적 추세나 국내적 경제건설자립국방의 기운과 여건에 비추어 우리의 국민적 념원인 통일도 이제 성수될 날도 머지 않았다고 보아진다.

우리는 이제 통일을 위한 전략과 병행해서 통일의 새로운 철학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도달했다고 본다.

통일의 전략은 현재 국민적 관심꺼리가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계 당국의 다각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통일전략의 문제는 여기서 새삼 여론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제 우리가 모색해야 할 점은 통일철학의 확립에 있다고 보겠다. 통일철학을 여기서 통합적으로 또한 포괄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 그러나 철학적 입장에서 한두가지 우리의 통일론의의 맹점을 지적할 수는 있을 것이다. 우선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통일 자체가 장기적 안목으로 보아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종전까지의 통일의 개념은 영토적 또는 지리적 통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보아진다. 즉 분단상태에 있는 국토를 지리적으로 재통일하고 이에 장애가 되고 있는 현재의 휴전선의 장벽을 철거하고 이러한 장벽을 완강하게 유지시키고 있는 북괴를 휴전선 이상의 한반도에서 구축함이 단기적 안목으로 본 우리의 통일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시점에서 이러한 통일개념이 통일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지극히 조작적(Operative)이며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장기적 안목에서 통일을 통한 국가발전을 염원할 때 우리의 통일개념은 보다 깊은 심층부에까지 파고 들어가야 할 것으로 안다.

특히 박대통령이 지적한 「선의의 경쟁」이라는 개념을 북괴와 관련시켜 상기하여 볼 때 지금까지의 우리의 통일론은 지리적 또는 영토적 재통일의 차원을 훨씬 벗어나서 통일을 통한 국가발전의 문제로 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지리적 또는 영토적 통일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면에 걸친 발전의 지표의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남한에 있어서의 국가발전을 위한 노력은 남한의 발전으로 국한한 틀속에서 이루어졌고 또 그 틀속에서의 발전을 위한 좌표는 이미 설정되었고 현재 성공을 견우고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통일을 전제로 한 모든 대책을 다른 한편으로 강구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의 건국이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른바 서독의 기본법은 제정당시부터 헌법제정에 대표를 파견하지 못한 괴압박지역의 국민을 고려해서 그들이 자유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할 때까지 동헌법이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할 정도의 여유를 가졌던 것이다. 이러한 여유가 있었던 까닭에 서독은 그동안 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 동독을 제압할 수 있었고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동독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고지를 점령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서독의 실예에 비추어 우리도 모든 불리한 악조건을

극복하고 통일에 있어서도 선제를 기해야 할 것으로 안다.

통일후의 민심수습의 문제는 상기한 바와 같은 통일문제의 심층부의 일부를 감안한 문제이다. 우리가 설사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지리적 또는 영토적으로 대한민국의 판도를 확대해서 종전까지 북괴의 치하에 있던 지역을 점거·소유하게 된다. 하더라도 북괴치하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거나 또한 충성을 원한다손 치더라도 적절한 충성의 방법을 불러 혼란을 조성하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민족적 연대의식의 강화를 기할 수 없고 못처럼의 통일의 효과는 대폭 삭감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광복후의 교훈을 되새김은 매우 의의가 클 것이다. 해방은 물론 우리에게 독립국가로 발족할 수 있는 고귀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귀한 계기를 국가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로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었는가는 매우 의심적이다. 우리는 확고한 지도세력의 부족·국민의 민주적 훈련의 부족,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전동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복에 대비한 뚜렷한 대책의 결여 등으로 무수한 시행착오와 혼란을 거듭했다고 보아진다. 체계적 국가발전의 철학이 모색되기 시작한 것은 5.16 군사혁명 이후의 일이다.

우리는 수복후에 같은 과오나 혼란을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이다. 수복후의 민심의 수습은 광복후의 국민통합(National Integration) 보다는 더욱 어려운 문제를 제시한다고 본다. 광복당시의 한반도는 일제의 단일통치체제속에 있었던 탓으로 우리 동포는 동질

적 정치분화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후의 사정은 광복후와는 판이하다. 휴전선 이북의 국민은 4 반세기간 북괴치하에서 살아왔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리와 혈연과 언어를 같이 할 뿐 정치·사회의식면에 있어서는 타국인이나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한반도가 공동된 역사를 갖고 있다고는 하나 북괴가 그동안 주입한 역사는 우리의 역사와 판이하다. 그럼으로 북괴치하의 30 대는 우리의 30 대라 전혀 다른 역사관과 역사의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민족의 유대의식형성의 관건이 되는 역사의식면에서 이렇게 판이하게 분열상을 나타내고 있으니 다른 요인에 관해서는 언급조차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연령계층상 중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30 대가 이렇거늘 그후의 세대에 있어서의 이질적 정치·사회의식은 구태여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북괴에 있어서의 이른바, 엘리트 (Elite)는 모두가 1인 독재정치가 요구하는 모든 시련과 형식을 거쳐 형성된 까닭에 이미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을 기대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다. 오히려 그들은 수복후 극단적 적대의식을 표명하거나 심한 좌절감으로 자학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전후의 독일이나 일본에 있어서의 군국주의적 엘리트나 연소한 군국주의전위대가 자살을 하거나 허탈감에 빠져 불량아집단으로 타락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우리의 수복은 북괴치하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일종의 혁명

적 변동을 수반하게 됨이 분명하다.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국민적 대변동을 야시시킨다. 그럼으로 민심수습의 문제는 북괴치하의 국민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차원을 달리해서 거국적 문제로도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만일 그 기회에 국민적 대동단결의 관전이 될 수 있는 뚜렷한 이념과 그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격심한 국제적 경쟁에서 탈락하게 될 것이며 대내적 국가발전의 기틀을 영원히 잡지 못하게 될 것이다.

민심수습은 이른바 사회화과정(Socialization)의 첫 단계이며 국민의 사회화는 그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지표이다. 그럼으로 우리가 수복후 민심수습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후의 정치적 안정, 사회적,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토대가 근본적으로 화해된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 2. 가상되는 수복의 제형태

수복후의 민심수습방안은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조건하에 수복을 하는가? 또한 수복의 지역이 한반도 전역인가 또는 휴전선 이북의 특수지역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럼으로 특정한 수복의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민심수습을 논함은 일반론에 그치거나 무의미한 일이 되기가 쉽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나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현실적으로 수복이 국가의 중대사이기는 하나 아직 이렇다 할



결정론이 없는것이 사실이고 또 현시점으로는 그럴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시기가 언제 되는지 간에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의 수복이 무력을 통한 폭력적 방법에 의존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력적 폭력이 아닌 다른 형태의 비폭력적 수단에 의존하는가에 있다고 보겠다.

먼저 무력을 통한 폭력적 방법에 의한 수복의 방법을 생각해 보자. 이 방법은 지금까지 가장 개연성이 많은 방법으로서 우리는 일찌기 그러한 경험을 부분적으로 겪은 일도 있다. 우리는 6.25 전란시 북괴의 남침을 당하여 일단 후퇴했다가 다시 북상해서 압록강 국경선까지 전격해서 단기적으로나마 평양을 점령하고 대부분의 지역을 군사적으로 관장한 일도 있다. 그러나 당시의 수복은 우발성이 강했고 또 단기적인데다가 전란이 다른 한편으로 진행중이었던 까닭에 민심수습의 문제는 주로 군의 정훈국의 관장사항이었다.

더구나 작전지휘권이 국연군에 있었던 까닭에 우리 국군의 정훈활동에도 많은 제적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거두절미하고 당시에는 정부 자체에 이렇다 할 뚜렷한 민심수습책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까닭에 군의 정훈국 자체의 군사적 목적에 국한된 단기책 수습책밖에는 있을 수가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 무력을 통한 수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의 타당성 여부일 것이다.

물론 우리는 무력통일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북괴치하의 전역 또는 일부의 수복도 관념적으로 가정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외적 조건과 제약이 너무나도 많고 또 현재로 보아 그러한 역기능적 제요인이 가까운 시일에 해소될 가능성은 날이 갈수록 휘박하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력적 폭력을 통한 수복이 전제된다면 일차적으로 군의 정훈기능보다도 군 자체의 전투수행능력에 대한 평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군의 전투수행능력은 전투에서 승리함을 제일의로 삼고 설사 민심수습을 고려한다손 치드라도 그것은 승리를 추구하는 수단의 일환으로서 밖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민심수습과 큰 관계가 없다.

그것은 소극적으로 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제요인을 제거한다는 단기적 안목에서 이루어질 뿐이다.

무력수단에 의한 수복과정이나 수복직후에 예상되는 통치형태는 수복지역에 대한 군정의 형태일 것이다. 이것은 부득기한 일로 생각된다. 수복지역에는 반대세력이 잔존해서 무력항거를 부분적으로 시도한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민심수습의 전제조건이 되는 치안유지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수복의 첫 단계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군정이다.

군정을 통해서 공산세력이 제거된다 하더라도 곧 남한에 있어서와 같은 민주적 원칙에 의한 정치를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과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조치는 일종의 혼정시대를 통해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다수의 북한주

민은 년래의 속박으로 부터 벼란간에 해방이 되는 까닭에 그배들의 앞으로의 활동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정치문화를 청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복귀치하에서 조성된 정치·사회·문화를 따르기가 쉽고 마침내는 뜻밖에도 공산세력의 도구도 이용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력에 의한 수복은 앞으로 점점 더 그 가능성이 휘박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무력수복후의 민심수습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군의 정훈국이 담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작전지역내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활동에는 실사 민심수습 목적을 위한다손 치드라도 상당한 제약이 있겠고 전시체제에 있어서의 군민의 협조관계는 많은 난점을 수반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무력수복시의 민심수습책의 확립은 군·자체에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정훈국의 임무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군정시대의 정훈국에 의한 민심수습은 치안유지 목적 이상의 영역을 넘지 못할 것이며 본고에서 논하에는 사회화 또는 사회통합의 단계에 까지 이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정훈사업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현재의 정훈국의 비군사적 사명의 완수를 위해 수복시에 대비한 군민합동의 준비작업이 소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가정할 수 있는 것은 무력에 의하지 않는 평화적 수복이다. 이러한 가정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는 현재로서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의 시기를 1970년대말이나

1980년대로 잡아 본다면 이러한 가정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몇가지 징후를 들 수 있다. 첫째로 핵무기의 등장으로 전쟁을 통한 국제적분쟁의 해결이 점점 어렵게 되고 따라서 모든 국가가 무력을 통한 해결 대신에 외교협상을 통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월남 중동의 제지역에서는 국지전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에 있어 교전당사국들은 외교적 협상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거나 국제연합등과 같은 국제기구가 그 조정 에 나서고 있다.

냉전의 시대가 지난 오늘날 세계적 핵병무드는 모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길을 트기시작했다고 본다. 종전까지 호전국의 상징을 이루고 있던 중공도 이제와서는 대내적 전투체제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교태외교전쟁에 광분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미국은 닉슨대통령 시대에 이르러 이른바 닉슨독트린의 일환으로 해외에 투입된 미군을 점차적으로 철수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둘째로 아이디어 로지의 종언 현상을 들 수 있다. 오늘날의 세계에 있어 아이디어 로지의 종언은 정치적 해결 보다는 비정치적 영역에 있어서의 경쟁현상을 자아내게 되었다. 국제적 분쟁의 해결은 이제 아이디어 로지보다도 실리추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분단된 독일에서는 금년들어 4차에 걸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비정치적 차원에 있어서의 교류는 시작된지가 이미 오래다.

그리고 통상교역량도 매년 놀라운 상승율을 표시하고 있다. 심지어 중공도 그동안 자유국가와 통상교역을 해왔거니와 금년들어 일종

의 문호개방을 선언하게 되었다. 종전까지 가상귀국으로 인정해온 일본에 대해서 까지 불가침조약의 체결을 제안할 정도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서방국 외교의 이면에는 물론 정치적 복선이 있다손 치더라도 아이디어로지 일변도의 외교로선의 변질을 입증하는 것이다 보겠다.

세째로 국내적 여건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자립경제·자립국방을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했고 년차적으로 그 목적을 단계적으로 실천해 왔다. 이미 제1차, 제2차 5개년 경제기획사업을 거의 마치고 앞으로 제3차 5개년 기획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이 같이 경제건설을 착실히 해가면서 동시에 자주국방을 위한 국민적 재원성도 시도해 가고 있다. 이 같이 국력의 충실을 기하는 한편 외교면에 있어서도 고도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중립국외교의 강화는 물론 금년에 들어가면서 부터는 비적성공산국과의 접촉태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북괴의 실정을 볼 때 6.25와 같은 전면적 남침의 기회는 점점 위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56년의 이른바 자주로선선언은 중·소의 이념분쟁속에서, 현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고민책이었거니와 중공이나 소련이 공동으로 북괴의 남침을 지원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세력균형의 원천에 비추어 중공이나 소련중의 어느 일국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의 변동을 일방적으로 초래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보아진다. 북괴에 있어서의 이른바 전후의 복구사업은 막대한 군사비지출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북괴는 그동안 남한에 있어서의 발전을 저지할 목적으로 간접·직접의 모든 폭력수단을 다했으나 그것도 이미 한계선에 도달하여 폭력적 방법과 비폭력적 방법인 지하각조직을 병용하는 새로운 전술을 쓰기 시작했다.

이러한 방향전환이 정치적으로는 남한의 적화통일이라는 대전제하에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기는 하나 상투적 폭력적 침공이 어느 정도 상한선에 이른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교적인 면에서 북괴도 이제는 상당한 융통성을 표시하게 되었다고 보아진다. 그동안 북괴는 대중립국외교에도 력점을 두었고 앞으로는 중공이나 소련의 뒤를 이어 비적성 국가라고 인정되는 서방국가와의 접촉의 가능성이 클 것 같다.

이상에서 지적한 몇가지 국내외적 여건의 변동은 앞으로 무력적 방법에 의한 수복통일에 많은 제약을 줄 뿐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비군사적 방법에 의한 통일의 전망을 길게 한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는 우리가 북괴와 대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다. 여기서 몇가지 가정을 또 세울 수 있겠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공산당과 대결하게 되는가는 본고의 본질로 보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공산당과 비폭력적 차원에서 대결하게 된다는 사실만이 중요할 뿐이다.

## Ⅱ. 수복후의 사회화

### 1. 민심수습과 사회적통합

민심수습에 있어 기본적 역할을 하는 것은 대민관계이며 대민 관계에 있어서도 핵심이 되는 것은 선전 또는 선무-공작일 것이다.

그러나 선전 또는 선무공작으로서 우리가 이룩하려는 통일외 근본목적은 달성할 수는 없다. 우리의 고차적 통일목적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민심수습에 있어 선전이나 선무공작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선전이나 선무공작은 기술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며 그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선전을 통해서 수복후의 북한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바에 순종하는 태도를 조성시키고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을 어느정도 기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전이 효과를 견우자면 선전에 앞서 또는 선전에 병행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전제조건이 있다고 본다. 우리는 수복시 민심수습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유의해야 하는 것은 광의의 사회적 통합 또는 북한주민의 민주적 사회화이다.

① 사회적통합은 민심수습의 전제조건이다.

사회적 통합은 단언해서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사회라는 특정한 사회의 일원이라는 공동체의식을 갖게끔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내에서 자기들이 물리적으로 투쟁하지 않고 그들의 분쟁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진정한 보장이 있다」 는 안전공동

체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랜 학정에 시달린 북한주민은 자아를 공동체내에 매몰시켰고 상부로 부터 하달되는 명령에만 순종해 왔다. 그리고 복귀는 이러한 순종을 확보하기 위해 위장적 참여의식을 강요하는 한편 철저한 통제기구를 구사해 왔다.

그럼으로 민심수습에 있어 기본적 과제는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의식을 버리게 하고, 안전공동체의 여건을 조성해 주는 한편 민주적 질서체계내에서 자아를 재발견하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 된다.

이것은 통일후 우리가 민족적 문열이 없이 통일된 민주국가로 발전해 갈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본다.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동일체의식이 가장 긴요하기 때문이다. 만일 안전공동체의 여건을 조성해 주지 않고 불안과 공포분위기속에서 민심수습을 시도하게 된다면 단기적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어도 장기적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 가령 모든 통제가 해체된 상태에서 총선거를 실시할 경우 북한주민들은 지리적 결속을 통해서 국가적 통합을 저해하는 이질적 세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수복후의 사회화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일 것이다. 우리는 가치관생활양식 취미 습성 성격 태도면에 있어 4 반세기동안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재생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자가 상용하던 언어부터 고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공산주의이론일반과 특히



북괴의 정치·사회체제에서 안출된 공산주의의 이론과 설계를 민주주의이론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초태한 이념을 대조시켜 가면서 공산주의이론이나 그동안 북괴가 안출한 이론과 이념은 이미 새 시대에는 통용될 수 없다는 인식을 주고 민주주의이론과 대한민국의 이념이 새 시대에 통용되는 새로운 이론과 이념이라는 인식을 깊이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산치하에서 배양된 생활양식 습성 태도 취미 등등은 모두가 낡은 것이고 대한민국이 제시 또는 택하고 있는 것이 모두가 새로운 것이며, 그것을 빨리 또한 효과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다는 인식을 주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상과 징벌을 신속히 또한 일관성있게 실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수복후 우리의 세력이 물심양면으로 북한에 침투해 가면 자아감각을 상실한 북한주민들은 신속한 모방을 잘 하려고 들지를 않을 것이다. 특히 오랫동안 배양되어 교질화된 금욕습성은 새로운 소비문화에 대하여 반발하고 반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반발심이나 반감이 시대착후적인 것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우리의 문화생활에 빨리 적응한 사람에 대해 신속한 보상을 해주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반발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나 농체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인간이 갖는 모방습성은 상당한 기능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우선 전형적 한국인의 모델을 미리 구상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일성치하의 북한주민들은 오랫동안 김일성전기에서 전형적 공산주의적 인간을 찾도록 강요되어 왔다. 그리고 김일성의 날조된

전기는 북한주민의 행동의 이념형으로 변했고 각종의 마쓰·메디아는 이러한 이념형의 추종습성의 여건을 구성하였다고 본다. 대체로 북괴에서 조성하려는 인간형은 반명적·전투적·교조주의적·감정적 인간형이다. 실로 전체주의적 독재정치 of 전형적 인간형이다. 수복이 되고 나면 우리는 이에 대치할 만한 민주적 인간형의 전형을 북한주민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반혁명적·평화주의적·인도주의적·자유주의적 및 합리적 인간형이 전형적 민주적 인간형임을 북한주민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과거나 현재의 대한민국의 엘리트의 상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과거나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구축에 이바지해온 여러 명사의 행태를 소상하게 조사하여 북한주민의 민주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해노아야 하겠다. 민주사회에서는 어느한 개인에서 전형적 민주적 인간을 찾아낼 수는 없다. 무수한 엘리트는 모두 뚜렷한 개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엘리트의 전시는 종전까지 김일성우상화의 습성에 젖어있는 북한주민의 경화된 생활감정을 다양화시킴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본다.

## 2. 문화적 동화

전술한 사회적 통합의 기술적 과정에서 북한주민의 문화적 동화작용의 비중은 자못 크다고 생각된다. 문화의 개념은 사람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화적 동화작용이 사회적 통합에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은 서구사회학자들의 공동된 견해이다. 문화

적 동화작용을 통한 북한주민의 민심수습은 강압적이며 위협적 민심수습보다도 장기적 안목으로 보아서 훨씬 더 효과적이다. 또 여기서 가정된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전제로 할 경우 폭력적 수단에 의한 민심수습은 우선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발작 더 나가서 우리가 공산당과 대결하는 상황까지를 전제할 경우 문화적 동화를 통한 민심수습은 가장 긴급하다고 보아진다.

문화적 동화작용의 첫째 기능은 단일 지주적 공산주의 의식을 불식시킴에 있다. 공산주의적 문화란 단언해서 정치권력 구체적으로는 어느 한 독재자에 예속된 문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산사회에 있어서는 정치권력이나 독재자의 의사와 독립된 자치적 문화가 있을 수 없다. 대략 공산독재자들은 이른바 문화정책을 통해서 단일지주적 권력강화를 시도하게 된다. 중공에 있어서의 문화혁명이 권력에 의해서 조작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괴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북괴에도 이른바 문화단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북괴의 모든 문화단체는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으며 예외없이 북괴노동당의 열성당부에 의해서 조직·운영·통제되고 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문화현상은 이와 정반대된다. 각종의 문화단체는 제작기의 독립성과 개성을 가지며 그 조직이 자연발생적이다. 그럼으로 그 활동도 문화적 목적에 매우 충실하다. 따라서 우리의 문화를 북한지역에 이식시키게 될 경우 북한주민이 하루라도 속히 우리의 문화에 동화한다면 그 만큼 공산주의적 의식구조

가 변경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문화단체를 산하에 예속시킴으로써 자력상화를 시도하는 공산당의 노력은 헛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자기가 원하는 문화활동을 방입하는 정치체제와 이를 압제하려는 정치체제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북한주거에게 제지했을 경우 그들의 선택의 방향은 자명할 것으로 안다. 그렇게 되면 공산당은 디디고 설 기반을 상실하게 된다.

다음 문화적 동화는 공산독재정치에 대한 대항의식을 배양해 준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는 오랫동안 반공문화를 형성해 왔고 근년에 와서는 승공문화를 구축하게 되었다. 공산당의 비인도적 문화에 대해서는 전투적 반공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화의 시정이다. 그럼으로 문화적 동화작용은 대공투쟁의식을 양양시킴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자유문화에 접촉된 사람이 자유를 앗아가는 정치세력에 극력 항쟁하게 됨은 우리가 능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문화적 동화작용에 있어 우리가 새삼 검토해야 할 점은 통일을 전제로 한 민족적 문화의식의 확립이라고 본다.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북한주민의 전체주의적 문화의식구조를 변질시켜 우리의 문화의의구조속으로 용해·융합함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유한 문화의식구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나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아직도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반공·승공의식이 단기적 목적에는 적합하면서도 장기적 목적에는 적합치 않은

면이 있다고 본다. 민족통일의 입장에서 볼 때 반공·승공은 모두 현실적으로 전쟁상태를 유발한 가능성이 큰 긴장·대결속에 형성된 이념이다.

현재와 같은 긴장·대결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반공·승공을 우리의 전략적 이념으로 삼을 수 밖에 없다. 승공이념은 긍정적 성격이 강한 까닭에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반공이념보다 앞섰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차원을 달리해서 우리가 수복후 통일국가를 달리해서 우리가 수복후 통일국가를 이룩하여 우리가 저항해야 할 문화이념을 감안하여 볼 때 반공·승공은 긍정적 측면보다도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우리에게서 수복후 북한주민의 문화의식을 급수시킬 수 있고 통일국가를 형성할 후에도 우리가 저항해야 할 적극적이며 긍정적 문화체계의 확립이 요청된다고 본다. 현시점에서 이러한 긍정적 문화체계는 우리의 대공태세를 둔화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중화를 시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복후에 대비해서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하는 바는 반공·승공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적 통일국가를 형성을 위한 과도적 수단이라는 점이다.

이와 연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반공문화가 북한주민을 모두 적성시하는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다. 북한주민도 우리의 동포로서 통일후에는 북한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이다. 다만 그들이 북괴의 통치하에서 북괴에 의해서 북괴에

대한 충성을 강요당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적은 북괴의 권력핵을 구성하고 있는 집단과 그 집단이 안출해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체제도와 관행이다. 북한주민의 그 굴레를 벗어날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형편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볼 때 반공분화는 수복후 북한주민에 대한 적대의식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점으로 보아도 전술한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우리의 분화체제의 확립은 매우 중요한 효과를 갖는다고 본다.

### 3. 구심세력의 확보

다음으로 논제되는 것은 우리가 수복하였을 경우 장기적 또는 단기적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누가 민심수습의 담당자가 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물론 무력수복후는 파도적으로 군정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북한전역이 작전지구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는 까닭에 민심수습은 군진제와 특히 정훈국이 관장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은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그러나 무력수복이 아니고 평화적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이 경우 첫째로 요구되는 것은 사상면에서나 승소면에서 북괴집단을 허가할 수 있는 전위집단이며 둘째로는 북한주민들도 하여금 대한민국의 사회체제에 대해서 애착과 충성을 갖도록 하는 후속집단이다.

첫째의 전위집단은 북괴집단으로 부터 민심을 이탈케 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두번째 후속 집단은 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대한  
민국에 대한 충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전자는 정치  
집단서 성격이 강하고 후자는 사회집단의 성격을 더욱 갖는다. 이러  
한 집단을 어떻게 수복에 대비해서 형성하는가는 현재의 남한의 정  
치·사회적조건에 비추어 매우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수복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러한 집단을 확보해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전위집단의 구성부터 생각해 보자. 이 전위집단은 사상적  
으로 확고한 민주주의자라야 하고 실제에 있어서 반공사업에 충성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 찾아내가는 매우 쉽다. 과거의 유능한 정훈장교·  
공산치하에서 생명을 걸고 귀순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대공사업에  
있어서 업적이 컸던 사람·공산주의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조예가  
깊고 이에 대한 비 판능력이 있는 사람 기타 언론인·과거에 수사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등등에서 추려본다면 상당한 결원이 동원될  
수 있다고 보아진다. 여기서 출신지역별로 이들을 분류해 놓는  
것도 의의가 클 것이다. 이들중의 상당수는 과거의 연고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일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예외적  
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출신지역별 분류와 출신지역  
에 있어서의 민심수습을 위한 기능·역기능표의 작성은 더욱 효과적인  
민심수습을 위해 매우 중요한 뜻을 갖는다고 보아진다.

과거 4 반세기에 걸친 북괴의 사회화작용으로 북한주민의 인구가동

은 매우 심했을 것이며 연고지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달라졌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전절지향적 한국인의 사고양식이 그동안의 최 뇌공작으로 완전히 불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노년영층에 갈수록 그러한 사고양식의 심도는 깊을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우리의 전위집단이 파괴된다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도 그 효과는 배가되리라고 보아진다. 가령 특정지역의 수복이 이룩될 경우에도 이러한 분류표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후적집단의 문제이다. 후속집단의 임무는 북한지역에 있는 사회단체를 우리의 사회단체로 흡수함에 있다.

형식적으로 본다면 북한지역에도 남한의 사회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회단체가 많다. 북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북한주민의 분야별 이익보출을 위한다는 명목을 빙자해서 더욱 철저한 조직화를 위해 많은 종교·문화·예술·사회단체를 조직하였다. 이러한 사회단체가 본래 의도한 비정치적 차원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북괴의 사회화정책에 편의를 수고 있는 것이다. 가령

「불교도연맹」 「기독교동맹」 「천도교연맹」 등의 종교단체는 북괴의 본질로 보아 도저히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나 북괴는 이러한 반체제적 집단까지 형식상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이 사대비 종교단체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종교단체도 북괴노동당이나 마찬가지로의 강령·규약·조직원칙·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한 까닭이다.

이러한 북한의 여건하에서 우리의 후속집단은 북한의 이른바 사회



집단을 우리의 사회집단속으로 흡수해 가는 것이다. 무시하다 싶이 남한의 힘의 원천은 사회집단의 다양성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힘의 원천을 통해서 북한주민의 민주주의에로의 조직적 귀의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남한에 있어서의 사회집단의 엘리트들은 대체로 사회집단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반체제적 공상당에 대한 철저한 투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특정한 분야의 조직활동에 대한 의욕과 조직의 확대·강화의 능력도 있다. 그럼으로 그들이 수복지역에 진출하여 관심분야의 조직강화에 종사하게 된다면 우선 단일지주적 북한지역의 사회조직을 파괴하게 될 것이고 다음으로 북한주민을 다양화된 사회조직속으로 흡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북괴의 존립기반을 와해시키게 될 것이고 자유화의 붕조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 Ⅲ. 민심수습의 대비책

### 1. 국민적 정치훈련

수복후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민심수습이 가능하자면 몇가지 우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고 본다. 우선 민심을 수습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명분이 뚜렷해야 하겠고 그 명분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전자는 정치에 있어서의 정통성을 요구하고 후자는 능률성을 요구한다.

정통성은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정부가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이며 대한민국정부에 대해서 모든 충성을 다하겠다는 심정을 굳히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인이 된다.

정통성을 구성하는 이념적 요소로서 우리가 북한주민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유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현실적 요소로서는 발전된 경제건설·새신된 행정체계·도시와 농촌간의 격차의 해소·국민적 통합·과학기술의 발전·교통과 통신수단의 전국망·마쓰메디아의 보편화등등 근대화의 제국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현실적 요소를 구성하는 제국에 대한 관심은 워정자나 국민간에 어느 정도 보편화되고 있고 또 근대화를 지향하는 업적도 현재 상당히 이룩되고 있으며 이러한 업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축적될 것으로 안다. 현재의 추세로 보아 1970년대 후반기에 가면 우리가 원하는 동일의 여건구성도 이루어지리라 고 전망된

다. 그리고 이런 점으로 보아서는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선택의 기회를 준다면 우리가 복귀를 능가해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적 국면에 있어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적 이념을 현실적으로 생활화하고 있는가에 있다고 본다.

민주주의 자아는 본래 우리의 토착적 이념이 아니고 외래적인 것이다.

우리는 지난 4 반세기동안 민주주의를 국시로 표방해 왔지만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내면화는 더욱 더 안되어 있다. 민주주의를 운위함은 일부의 지식층에 국한되어 있고 정치적 엘리트나 사회적 엘리트간에도 만족스러운 민주주의의 이해는 부족하고 더구나 내면화는 잘 안되어 있는 실정에 있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이해부족과 내면화의 결여는 선거와 같은 정치과정에서 노정되기가 일수이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아 우리가 북한에 진출해서 북한주민의 충성심을 배양함에 있어 큰 저해요인이 된다고 본다.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정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남한의 정치이념과 현실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생각할 때 대한민국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될 것이다.

민심수습이 민심의 심층부에 까지 이를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 남한에 있는 모든 국민이 높은 정치의식을 갖고 있으며 민주주의

에 대한 심념이 확고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장점을 남에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할 줄 안다.

앞서 민심수습의 담당세력으로서의 전위집단과 후적집단을 언급하였거니와 이러한 집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내면화면 민주적 심념 및 민주적 지도력량이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는 그들의 정치훈련의 정도에도 달려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남한의 국민들이 어느 정도로 정치훈련이 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들은 결국 자기들의 의사를 전달한다손 치더라도 국민적 의사를 반영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에 국민간에 집결·응고된 민주적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의 활동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휴전선의 장벽이 제거되어 남북간에 인적 왕래가 자유스러워질 경우를 가상한다면 분계는 더욱 심각해진다. 북괴는 북한주민을 교화작업으로 철저한 정치훈련을 시켜왔다. 더구나 전후의 세대에 있어서는 정치교육이 더욱 철저하게 내면화되고 생활화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들에게는 사상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부단한 훈련으로 자기들이 받은 '사상교육을 남에게 전달하는 능력도 갖추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우리로서는 그동안 국가발전을 위해 경제와 행정에 매몰되었던 정치력을 다시 찾아 국민의 정치교육과 정치적 훈련에력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안다.

이리하여 수복에 앞서 우리가 통합된 국민적 역량을 정치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북한주에게 민주주의의 시범을 보임으로써 민심수습의 실은 더욱 효과적으로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2. 통일문화의 형성

우리는 1960년대를 통해서 「선건설·후통일」의 입장을 견지해 왔다. 1970년대는 이러한 입장의 후반기로 보아진다. 그럼으로 우리의 모든 정신적 에너지도 모든 면에 있어서의 건설로 집결되었다. 그 결과 우리의 민족통일의욕도 건설면에 매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더구나 발전도상에 있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정치과정과 사회과정의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까닭에 정치적 과정은 사회문화적 과정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는다.

그럼으로 분화적 발전도 국가의 정책적 관심이 없이는 기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현재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큰 저해요인은 북괴집단의 존재이다. 그럼으로 60년대까지 우리가 조성해 온 반공·승공의 문화는 통일문화형성을 위한 전단계로 보아야 한다. 이 단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면보다는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한다는 소극적 면이 더욱 작용하였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우리가 수복을 하게 될지 모르는 현시점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종전의 소극적 문화로만 만족할 수는 없다. 이제는 정책적 차원에서

나 국민적 노력에 있어서나 통일을 지향하는 적극적 문화를 형성해야 할 전환기에 이르렀다고 본다.

여기서 북괴의 그동안의 통일정책과 통일문화형성의 실태를 비교·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들 사회에 있어서는 문화가 철저하게 권력 집단에 예속되어 있는 까닭에 문화현상 자체가 정치권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북괴 집단은 형성초기부터 남한의 적화통일을 기본정책의 하나로 간주하여 왔기 때문에 모든 문화도 이에 대응해서 적화통일 목적으로 재편생되고 있다. 그럼으로 북한의 소유 문화집단은 가장 비정치적 문화집단이라 할지라도 북괴의 지령 하나로 일시에 적화전선의 전위대 구실을 할 수 있는 모든 대세를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 문화집단의 취약성을 잘 알고 있다. 정치적 문화집단은 이를 지배하는 정치세력이 화해됨과 동시에 화해될 운명에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북한에 있는 이른바 문화집단도 북괴의 권력적 작용이 해소될 때 화해되거나 가장 현실적 문화집단으로 잔존하게 될 것이다. 단언해서 그와 같이 허세를 자랑하는 이른바 문화집단과 문화현상은 혼란상태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적 혼란기를 이용하여 허탈상태에서 방황하는 북한의 문화를 우리의 강력한 통일문화에 흡수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를 놓고 볼 때 우리에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구조적으로 보아 우리의 통일문화는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반공·승공을 위한 냉전형의 문화이다. 이것은 우리의 대공태세를 위한 국민적 단합을 기함에 있어 필수를가결하다고는 보나 막상 우리가 북한지역에서 활동을 전개하게 될 경우를 가상한다면 내용면에 있어 더욱 큰 포용성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북한의 문화가 시대조류에 매우 뒤늦었다는 면을 지적하기 보다는 우리의 문화가 훨씬 앞섰다는 면을 강조할 필요성이다. 우리의 문화가 북한의 반화보다도 훨씬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주민이 실증적으로 확인하게 될 경우 그들은 자발적으로 우리의 문화에 동화되기를 바랄 것이다.

이러한 통일반화의 형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문화를 우리의 고유한 생활양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서 공통된 생활지침이 우선 확립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생활지침이나 생활규범은 통일후에 능히 북한주민의 생활까지도 규제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이면서도 강력한 것이라야만 한다. 그것이 포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이 능히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야만 하고 또 그것이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의 가치관의 최대공적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야만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에게 있어 국민이 공동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이나의 문제는 결코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실천적 차원에서 우리에게서 국민교육현장은 우리 국민이 문화적 통합을 기할 수 있는 거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아진다. 문제는 우리 국민이 국민교육현장을 어느 정도로 생활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국민교육헌장이 교과과목에 편입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급이 널리 시도되고 있다. 그 정신이 철저하게 국민생활에 내면화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축으로 통일문화의 형성도 가능하여질 것으로 본다. 그럼으로 통일문화형성에 있어서도 국민의 가치관의 집결체로서의 국민교육헌장의 생활화는 큰 구실을 한다고 본다. 여기에 국민교육헌장의 생활화를 위한 정부의 효과적 방안이 더욱 기대되는 것이다.



## 결 어

본문은 현재의 국내외적 실정을 감안해서 예상될 수 있는 수복 통일 제형태를 논의하고 원칙적으로 평화적 방법에 의한 수복통일의 전제하에서 논의를 진행시키되 무력수복의 경우도 가상하여 보았다.

첫째로 무력수복시에는 북한전역이 수복되었을 경우와 부분적으로 수복되었을 경우에는 나머지 지역은 좌전지역이 될 것이고 수복된 지역에서도 군정이 불가피하다. 또 북한지역전역이 수복되었을 경우 일찌라도 단기적으로는 군정시거나 일종의 준정시기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으로 무력수복의 경우 민심수습의 가장 중요한 해를 이루는 것은 군의 정훈국일 것이다. 그러니 수복에 대비한 정훈국의 강화책이 군당국에 의해서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로 무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에 의한 수복을 가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민심수습은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단일지주적 공상당으로 부터 이탈시키는 소극적 민심수습과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을 확보하는 적극적 민심수습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로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지금까지의 반공·승공이념에 병행해서 통일이념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통일이념의 윤곽은 지난번의 8. 15 특별성명으로 대략이 들어났다.

우리로서는 그 성명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천적 강령을 하루 속히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네째로 민심수습은 북한주민의 소극적 순종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적극적 참여를 기하는 장기적 대책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주민의 처의의식의 조성으로 인해 우리의 통일목적과는 반대로 북한주민간의 분열적 세력구축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본다.

다섯째로 국내적 대비책으로 민심수습목적을 위한 구심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 세력은 북한지역내의 반공, 민주세력과 남한에서 훈련된 요원으로 구성될 것이나 장기적으로 보아 북한지역의 반공세력은 민주적 훈련이 부족한 까닭에 그 역할에는 한도가 있다고 본다. 그럼으로 우리가 훈련·육성한 요원의 민심수습을 위한 전위적 역할이 그 후의 북한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핵심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문화형성을 위한 우리의 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든다. 남한에 있어서의 현재의 통일 문화는 반공·승공이라는 단기적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산세력이 한반도에서 구출되었을 경우에 대비한 주체적 통일문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현재 제시된 국민교육현장의 생활화는 이러한 통일문화형성의 교두보가 된다고 생각된다.